

반도체 날았지만 갈길 먼 코스피… “이익구조 체질개선을”

코스피, 일평균 2%대 변동성 확대
증시·산업 전반 ‘반도체 착시’ 심화
자본시장·실물경제 괴리 극복해야

한국 주식시장이 반도체를 등에 업고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중 뭇 돈은 증시로 증시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6000, 7000 시대로 나아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코스피, ‘달리는 기차’

코스피가 6000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 덕분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라는 운이 맞아떨어졌다. 반도체가 끌고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밀던 증시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는 최근 로봇 등 ‘피지컬 AI’ 바람까지 가세하며 꿈의 ‘6천피’ (코스피 6000)를 바라보고 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4분기 코스피200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양적으로 양호했다”면서도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밸리가 추세적이라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은 “2월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경기,

실적,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닌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투자심리와 수급에 의한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으로 판단된다”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물과 따르는 증시 극복 과제

하지만 실물경제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에 그쳤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친 국가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

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올해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이라는 호재와 미국 관세 등의 돌발 변수가 혼재하고 있어 경제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으며, 이후 반도체 사이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수출과 내수 사이의 뚜렷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의 ‘착시 효과’도 뚜렷했다. 지난해 성장률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사실상 반도체가 성장률 전체를 떠받친 것이다. 관세 파고에 자동차·기계 수출이 줄며 4분기 수출은 -2.1%를 기록했는데, 반도체가 없었다면 타격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을 뺀 제조업 생산은 뒷걸음친 것

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그러나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이런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거품론’이 현실화하기라도 하면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한국 증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스피 주기순자산비율(PBR)은 1.8배 수으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5.4배), 일본 닛케이 등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익을 내는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익 전 서강대학교 교수는 “코스피 6000·7000이라는 숫자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지수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 비중이 줄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실질심사 대상 확대, 개선기간 축소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 기간 최소화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간 누적된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를 핵심으로 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서며, 통합·일괄 심사 체계 도입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 등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

지 소요기간은 단축했으나, 투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신속한 한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업은 23개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활성화 기조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심사 조직 확충으로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기업이 실질심사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선기간 검증도 엄격하게 관리해 시장 잔

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제도 손질도 이뤄진다. 기업 부실과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월 최대 2% 특별분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반기 매월 최대 2% 수준의 특별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상품의 지난해 하반기 수익률은 32.85%로 비교지수인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25.77%)를 웃돌았다. 올해 1월 분배율은 1.93%를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말 최대 2%의 특별분배 정책을 시행해왔다.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분배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 상반기에도 특별분배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개인 간 금거래, 세탁 통로 악용사례 주의

금감원 Q&A

사기범, 본인확인 요청 비협조적
상대방 구매이력·신뢰도 확인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물 금 거래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금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대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과 금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

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경우, 금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범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환금성이 높은 고액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뒤,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해두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하는 방식입니다. 금과 같이 최근 가치가 급등해 거래가 활발한 자산에 접근한 뒤, 별도 가격 협상 없이 가액의 금을 한 번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해 판매자의 경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과정

